

4차산업혁명과 일터의 민주화 한국과 독일: 두 나라 이야기*

이 종 관**

- I.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
- II. 독일 이야기
- III. 맺음말: 인도적 경제를 향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역할

• 국문초록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그 선두에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비전은 다보스포럼을 주관한 WEF의 4차산업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지향적·기술 중심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부는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을 선언했지만, 사람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실종된 상태이다. 또 4차산업혁명의 출발기인 현시점에서 오히려 부동산투기, 가상화폐 투기 등 매우 반사회적 경제행위가 창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 4차산업혁명을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현재 우리 경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수행한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2A03068419)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미래인문학연계전공 주임교수

후, 지향점으로서의 인간 존재방식을 호모쿨탈리스로 밝혀낸다. 그리고 호모쿨투랄스라는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4차산업혁명 내면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조명한 후 4차산업혁명의 심층적 동력을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터의 민주화로 규명한다. 이어서 논문은 독일의 4차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4차산업혁명의 실질적 견인차인 기업의 미래 역할을 논의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 주제어

4차산업혁명, 비트코인투기, 부동산 투기, 호모쿨탈리스, 독일의 4차산업혁명, 사회적 시장경제, 일터의 민주화

I.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

1. 4차 산업 혁명의 꿈과 비트코인 투기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는 4차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역사의 물결이 급격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대중적 관심을 끈 것은 2016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이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사회전체를 혁명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인 듯하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사회는 4차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고 또 그래야만 미래를 향한 국가경제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혁명이 아닌 광풍이라고 해야 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에 대대적인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소위 비트코인 투기 광풍과 함께 부동산투기도 국가경제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극성을 부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 이루어내는 지극히 발전된 경제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혁명을 향한 첫 출발점에서 인간 경제활동의 합리성이 미신임을 폭로하는 투기 광풍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찰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비트코인의 탄생은 사실 2009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 아직도 비트코인의 개발자의 정체는 어둠 속에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개발 의도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비트코인의 개발자들은 2009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국제투기자본과 미국정부의 신자유주의가 결탁된 바르지지 못한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포착하였다. 때문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경제의 실질적 흐름을 결정하는 통화운영 시스템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탈중앙화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자본권

력의 결탁에 의한 통화조작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면서 전혀 다른 악의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악의적인 부작용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기광풍으로 일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 투기 광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직전에는 소위 갭투자라는 미명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의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다. 투기는 국가 경제를 망치는 치명적 독약이다. 투기로 이루어지는 경제는 대다수의 투자금을 싹쓸이하는 극소수에게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선사하는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을 파산의 지옥으로 추락시키는 악마의 놀음이다. 이런 악마의 놀음에 우리의 미래세대가, 특히 4차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 세대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의 잘못인가? 그들은 투기에 중독되도록 태어난 돌연변이 세대인가?

2. 한국경제: 일탈적 경제와 4차산업혁명

비트코인 투기 광풍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한다. 기술 그 자체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선의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어도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 선의의 설계가 선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은 그것을 수용하여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와 구조에 의해 그 기능의 선이나 악의가 결정된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투기광풍은 한편으로 기성세대들이 구축해놓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병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어떤 환경 속에 밀어 넣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우선 우리 젊은이들은 스스로 헬조선에 산다고 할 만큼 희망이 없는 양극화 구조에 감금되어 있다. 취직도 어려울 뿐 더러 알

바 일자리를 얻어도 저임에 시달린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이것이 또 그들에게 시급제 일자리며저 빼앗는 해괴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폭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작동하는 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영업장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데 높은 임대료는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지속시키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약자를 구하려는 정책이 결국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피해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위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해괴한 부작용의 원인을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구하는 사회 정책 자체가 오류라고 비난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원리에 의해 부자들의 소득이 더 증가하도록 하여 부자들에게 돈이 넘쳐흐르게 만들면 그 흘러넘치는 잉여를 그 약자들이 받아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낙수효과는 없다는 사실, 낙수효과는 오히려 거품폭발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같이 약자를 구하는 정책으로부터 정 반대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 상위계층들이 물질적 기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부담이 오히려 가진 자들에 의해 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약자들의 소득을 빼앗는 일종의 약탈적 구조가 우리의 경제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르지 못한 경제구조는 모두를 투기로 몰아간다. 사회의 상위 소득자가 되지 않으면 이 기괴한 경제구조에서는 숫자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결국은 지속

적으로 약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스런 체험은 투기를 통해 단번에 소득 상위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망상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 망상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광적 집착으로 실행된다. 우리는 이제 건물주가 조물주 보다 더 경제적으로 초월적 지위를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때문에 건물주로 등극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제가 창조되었던 것이다.

3. 건물주를 향한 집착, 노년 빈곤의 공포, 미래세대의 망상

그런데 사실 건물주를 향한 집착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것은 그 집착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빈곤으로 전락할 공포에 시달린다. 우리나라는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노동 능력을 잃는 노후는 그 자체 빈곤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극적 노후라는 미래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노동 없이도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 없는 지속적 불노 수입을 보장하는 대표적 수단이 부동산 임대이다. 따라서 미래에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마련하려 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는 계층은 이러한 상황의 최고 수혜자로서 다시 그들 부동산 가치 상승과 임대료 수입 증가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 반면 그 이외는 사람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임차인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계층은 그들 소득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명목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 이 빈곤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은 성실한 노동이 아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이 아니라도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가상화폐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막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반면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소규모 투자로도 천금을 획득할 수 있는 초기 국면이다. 발 빠르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한순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은 바르지 못하게 작동하는 경제구조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투기의 질곡에 빠져 있다. 취직을 하여 성실히 일하면서 받는 소득이 사실상 자신을 위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도 없는 정도로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정부는 이러한 질곡에서 탈출하는 솔루션을 젊은이들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고용되지 말고 혁신적 기술개발에 기반한 창업을 통해 대박을 터트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커버크 같은 젊은 대박영웅들처럼 살라고 훈계하며 결국 대박만이 살길이라는 망상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주입하였다. 그러나 혁신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인 개발열정, 그 기술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치열한 탐구 등의 장기간 노력이 이루어내는 성취이다. 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결코 어느 날 대박의 망상에 의해 단기간에 잭팟 터지듯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대박만을 욕망하는 탐욕적 망상에서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려는 열정도,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삶의 진실성도 다 상실되고, 오로지 대박에 대한 광적 집착만이 남는다. 대박을 꿈꾸는 자는 그저 대박이 가능한 곳만을 미친 듯 찾아다닐 뿐이다. 대박이 가능한 장소가 부동산이면 부동산으로, 또 암호화폐라면 암호화폐로 몰려다니게 된다. 하지만 그 부동산투기와 암호화폐 투기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지 그들은 관심이 없다. 일단 이 투기게임에서 승리하면 이 투기자본주의에서의 삶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은 오로지 대박에서만 자신의 삶의 미래를 찾는 세대로 변이하였다. 그런데 경제는 꼭 이러한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야 하는 것인가?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경제가 첨단기술을 통해 더욱 바르지 못하게 고도화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산업혁명의 실질적 진원지인 독일을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암호화폐 관련 기술의 발전의 메카는 독일 베를린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우리보다 활발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 더군다나 독일의 젊은 미래세대는 우리만큼 비트코인 도박에 빠져들지 않는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경제를 지탱하는 심층토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제는 사실상 인간을 경제적 존재(Homo economicus)가 아니라 인간을 문화적 존재(Homo culturalis), 즉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는 존재로 보는 경제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2차 대전이후 독일 경제의 이론적 기틀을 만든 경제학자중의 한 사람인 빌헬름 뢰프케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활동하는 인도적 경제(humane economy)를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4차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독일 경제의 심층토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제가 가야하는 바른 방향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정말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문화적 존재인가?

4. 인간, 문화적 존재인가?

물론 현대학문 가운데 의학, 뇌과학, 생리학 등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학문들이 어느덧 인간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리를 독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들은 객관적 과학성을 표방하기 위해 인간도 물리적 관점에서 나아가 공학적 방식 혹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연구한다.

만일 인간 중심 4차산업혁명이 인간을 이러한 학문에 의존하면서 인간을 물체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물리적 관점에서 인간중심 4차산업혁명을 기획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혁명은 인간을 물체처럼 취급하는 혁명이 될 것이다. 혹은 인간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공학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획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혁명은 인간을 기계화하며 인간이 사는 세계를 공장화하는 혁명이 될 것이다. 또 인간을 동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면, 그 4차산업혁명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충동의 굴레 속에서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고등동물의 생태계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인 인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절실하게 물어야 한다. 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인간이면서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체로, 기계로 혹은 동물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니체라는 철학자는 적어도 인간이 다른 존재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의미가 분명하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어 낸다.” 여기에 의문을 갖는 인간이 있을까. 사실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굶어야 하는 고난 끝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과는 달리 먹지 않는다. 이렇게 굶는 고난을 감수하는 인간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 혹은 타인의 자유와 인권 수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단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몸매라는 지극히 사적 취향에 속하는 가치를 위해 단식을 하기도 한다. 어쩌면 니체의 저 말은 그 조건문을 부정형으로 변형시켰을 때 더 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그런 변형을 시도해보면 니체의 그 말은 다음과 같이 다시 써질 수 있을 것이다. “살아야 할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조건이 조성된다 해도, 인간은 스스로 죽을 것이다.” 그런

데 정말 그럴까. 이는 철학이란 미명아래 자행되는 그 혼한 철학자의 말장난이 아닐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장난에서 암시되는 사태가 어떤 나라에서는 통계적 지표로 지지된다. 그 어떤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이다. 이 사실이 지표로 입증되는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들 중에는 비상한 관심을 끄는 지표들이 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비해 경제가 300배 성장하였다. 50년 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금년에는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평균수명 증가율이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50년 전 그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생존조건이 열악했던 시절, 그래서 평균수명이 현재의 40%에도 못 미치던 시절, 그 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현재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그 50년 전과 비교하면 폭증했다고 표현해야할 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으며 연간 자살자가 1만 5000명에 달한다. 그 뿐만 아니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계획하거나 꿈꾸는 사람이 700만에 이른다.¹⁾ 이러한 지표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생존의 조건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제가 300배 성장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50년 전에 비해 300배 향상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생존의 조건의 향상과 물질적 풍요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간들의 숫자가 폭증하

1) 홍 승 봉, “한국 12년간 OECD 자살률 1위 자살의 원인과 대책”, (http://www.google.com/url?sa=t&rcrt=j&q=&esrc=s&source=web&cd=1&ved=2ahUKEwjS2O-smZTFtAhWGzLwKHUP8A_oQFjAAegQIBxAC&url=http%3A%2F%2Fendotoday.com%2Fendotoday%2Fsuicide_04.pdf&usq=A0vVaw3h6WdNXG6SFGExvmLvmT, 2018.10.14.).

고 있는가. 인간이 그냥 주어진 생을 연장해가는 동물과 같이 생존하는 존재라면, 향상된 생존환경에서 또 물질적 풍요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태가 증가할 수 없다.

여기서 포착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의 섭취 혹은 풍요로운 물질의 향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생존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체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가장 분명한 것은 인간은 물체와 달리, 또 동물과 달리, 살면서 항상 자신을 살게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삶이 의미를 만들지 못할 때 그래서 살 가치가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따라서 스스로 죽는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질적 실존 현상이다. 인간에게는 의미, 가치, 목적성취 같은 질적 현상들이 인간의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II. 독일 이야기

1. 독일의 4차산업혁명: 문화적 인간과 사회적 시장경제

이제 우리 자신인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독일 경제의 심층을 4차산업혁명과 관련지어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상식을 우선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 한바와 같이 4차산업혁명의 진원지는 독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독일 4차산업혁명 비전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보스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시장 편향적으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은폐되었다. 또 이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 선언을 조급한 추격자의 입장에서 수용한 우리나라는 독일의 4차산업혁명 조차 시장자본 증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독일이 수행

하고 있는 정책의 표면만을 급히 벤치마킹하여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독일의 4차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미래비전의 심층에는 사실상 그들이 2차세계대전의 뼈아픈 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60여년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취한 인본주의적 문화 경제체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대전 후 독일 우파정당 연합인 기민-기사연합에 의해 기본이념이 정립되었고 1959년 좌파 사민당이 승인한 후 독일 사회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그 개념이 인간을 경제 체제에 부속된 한 요소로 보는 기능적 물질주의 경제관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철학적 바탕은 인본주의이다. 이 경제철학에는 경제가 인간들을 물질적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문화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실현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창시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창시한 이는 알렉산더 뤼스토브(Alexander Rüstow),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e), 알프레드 뮐러-아르막(Alfred Müller-Armack) 등 세 사람이다. 뢰프케는 그의 저서 『현대 사회의 위기』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정의가 “합리주의의 그릇된 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 사회적 시장경제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자유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연대의 책임을 동등한 인간됨의 조건(*conditio humana*)으로 중시한다. 뢰프케는 경제 제국주의, 경제적 환원주의 즉, 성장 정책에 대한 단순한 성장 주체의 축소와 단축에 선명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는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인간적 이

2) Wilhelm Röpke, *Die Gesellschaftskrisis der Gegenwart*, Eugen Rentsch, 1942; Wilhelm Röpke, *The Social Crisis of Our Time*, Univ. of Chicago Press, 1950, p. 53.

미지를 거부한다. 호모에코노미쿠스란 인간 이미지는 오로지 물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추구를 촉진할 뿐, 인간의 복잡한 동기 부여 구조와 다양한 인간학적 기본 구조를 간과 혹은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뢰프케는 양적 및 과학적 사고,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수학적화와 같이 경제 및 사회 학문에 자연과학의 방법을 맹목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비판한다. 인간이나 사회는 기계와 비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뢰프케는 일종의 컬트에 가까운 현재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를 "실험실, 수학적 함수, 현미경, 그리고 그 자체 무의미한 것으로 가정된 사실들이 서로 얽혀 이루어 내는 실증주의적 - 기술적주의적 - 물질적 문화"라고 설파한다.³⁾ 뢰프케는 이를 학문의 도구화, 기능화 및 인간의 제거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양적 - 기계적 사고방식과 그에 기반한 (사회) 공학적 태도라고 질타한다. 아울러 뢰프케는 사람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외삽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뢰프케에게 있어 경제의 척도는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이와 같이 인간을 수리적으로 물량화하는 과학의 탈을 쓴 경제제국주의를 거부하면서 특히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연대 책임을 인간됨의 조건(*conditio humana*)을 동시에 중시한다. 뢰프케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시장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회적 연대는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다.”⁴⁾

그렇다고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자유 경쟁 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빈곤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필요성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권리가 행사될 때 문화적 존재로서 인

3) Wilhelm Röpke, *Civitas Humana*, Erlenbach, Eugen Rentsch, 1949(1944), p. 133.

4) Landeskirchenamt der Evangelischen Kirche von Westfalen, “Die Soziale Marktwirtschaft ethisch weiterdenken”, (http://www.evangelisch-in-westfalen.de/fileadmin/user_upload/Angebote/Beratung/gesellschaftliche_Fragen/soziale_marktwirtschaft_ethisch_weiter_denken.pdf, 2018.10.14)에서 간접인용.

간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만족된다. 자유 경쟁 시장은 이러한 개인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이다. 이 때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자유 경쟁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보다는 문화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유라는 인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시장 경제가 독일 경제체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또 다른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자유가 없으면, 자발적인 자기 활동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⁵⁾

독일은 나치시대 파시즘의 전체주의적 폭정과 군비자본주의(Ruestungskapitalismus)의 중앙집중적 통제 경제의 억압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었다. 이 고통스런 역사적 체험은 그동안 독일사회에 잠복한 구조적 사회악이 무엇인지를 각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각성은 전후의 독일 국민이 독일을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국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공동선의 추구로 발전한다. 독일은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가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한다면, 허용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물질 조달 경제체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경쟁함으로써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유 경쟁 시장은 그 속성상 독점과 약자에 대한 착취 등 인간의 또 다른 존재 조건인 사회적 연대성을 훼손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시장은 경쟁에만 맡기면, 독점 경제 권력이 형성되어 공정한 자유경쟁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도 오염된다. 특히 독점자본은 정치적으로 독재 권력을 불러온다. 따라서 시장의 질서는 경제정책 이외에 사회문화적 차원의 정책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때문에 독일정부는 자유 경쟁 시장의 장점이 그것의 단점에

5) Walter Eucken, “Das ordnungspolitische Problem”, *ORDO*, Bd. 1, 1948, p. 73.

의해 침식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 경쟁 시장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제반 조건은 곧 인간의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자유 경쟁 시장의 순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내재적 파국요인에 대한 일종의 내진 설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유 경쟁 시장의 파국적 요인은 경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경쟁을 통해 시장의 우월 지위를 지배하는 집단과 그러한 집단에 의해 피해를 보는 집단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파열로 비화하여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붕괴로 귀착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갈등은 집단화되어 양극대결로 첨예화될 때, 사회 파열의 위기는 고조된다.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 집단적으로 첨예화될 수 있는 두 집단은 불행하게도 시장 경계를 지탱하는 두 축인 자본과 노동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시장에서는 역할을 분담하며 시장 경계를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시민 사회에서는 특히 민주적 시민 사회에서는 다 같이 시민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이들은 시민으로서 사회적 연대의 책임을 지고 함께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적 연대 의식은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이 잘 조정되지 못하면 상호 적대적 관계로 변질되어 대결상황으로 치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자유 경쟁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장애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은 사회로 전이되어 사회적 연대성을 훼손하고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비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각성한 사회적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 시장의 중추 구성요인임과 동시에 최대 갈등 요인인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사회적 신뢰구축의 핵심영역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사회적 동반 관계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주력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구축을 실현

한다.

2. 독일 4차 산업 혁명의 심층 잠재력: 일터의 민주화

자본과 노동이 직접적으로 만나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는 직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직장의 의미를 인본주의에 기초하여 정립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이 서로 인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동반자 문화를 조성한다. 인본주의 입각한 직장문화를 통해 조성되는 사회적 동반자관계는 독일에서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견실하게 실천된다.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이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각 기업의 내부에 스며드는데, 독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기업 경영에 관련된 중요사안, 특히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는데 반해, 독일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생산하는 기제로서 제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⁶⁾

인본주의적 직장문화와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공동결정제도는 독일 시민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독일의 경제적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노사갈등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에서 독일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데서 입증된다. 또 최근 독일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의 경영자들이 공동결정제도를 기업경영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동결정제는 경제 행위의 주체인 자본과 노동이 동반자로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탄력성의 모태

6) Michael Fichter & Ian Greer, "Sozialpartnerschaft als Gewerkschaftsstrategie - Beispiele aus 5 Laendern", *WSI Mitteilungen*, (9), 2003, p. 541.

가 된다. 실제로 독일은 2차대전 이후 1·2차 오일쇼크, 동서독 통일로 인한 경기침체, 2008년 금융위기 등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온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극복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이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 ‘고용 유지’라는 공동 관심사에 집중된 협상행동
- 해고 절제를 위한 사용자, 노동조합의 공동노력
- 경기부양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부지원책
- 기업 회생을 위한 노동자 양보와 고용유지라는 반대급부
- 직업 재훈련과 투자 유인을 위한 시간 확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특별한 사회적 관계라는 사실이다. 독일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단순히 사용자와 고용자의 대립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즉 독일의 기업가와 노동자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대립이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비화하여 사회적 위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의식하고서 시민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책임감 위에서 행동한다. 이러한 책임감은 상호신뢰와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내는 능력으로 실천된다.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전후 독일경제의 역사를 빛나게 하는 유산일 뿐 아니라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계승 발전되어야 할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경제 및 사회 문화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사

회적 동반자 관계는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을 낮춘다. - 고용률을 전체적으로 높인다. - 소득분배를 고르게 한다.⁷⁾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그들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첨단기술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그 후 Industrie4.0과 오늘날의 4차산업혁명으로 숙성된다. 이 4차산업혁명의 1차적 목적은 바로 독일 노동자들의 고도로 숙련된 현장지식과 지혜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스마트 설비와 또 그러한 스마트한 설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제공하는 소위 저비용 대량 개인 맞춤 생산체제(mass customazation)이다. 이 대량 개인 맞춤체제란 새로운 생산 및 수용 창출 전략은 중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중국과 우리나라도 급속한 추격을 통해 이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급속추격의 강박에서 이 전략의 실현될 수 있는 본질적인 조건이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체제는 적어도 개인 소비자의 취향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사회문화 환경과 노동자의 현장지혜가 존중되고 노동문화의 토양 위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두 문화는 다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일터의 민주화를 진작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몽환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스마트 설비의 도입이 어떻게 사회적 시장 경제를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4차산업혁명을 수행해가는 현재의 과정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설비가 원래의 4차산업혁명의 취지를 배반하고 반노동적인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시민 대화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독일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가장 먼저 참고할 문

7) AWS(Arbeitsgemeinschaft Wirtschaft und Schule), “Die österreichische Sozialpartnerschaft,” *Aktuelle Unterlage*, No. 82, 2015, p. 4.

건은 「녹색책자(Grünbuch)이다.⁸⁾ 독일연방 노동사회부가 발간한 이 책자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는 사회적 균형(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권력균형), 복지, 좋은 삶을 광범위한 국민이 누리는 것이다. 경제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는 한에서 모두에게 기여한다. 복지와 사회적 평화는 소비 수요, 기업투자, 기술의 발전이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사회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경제위기시에 자동적인 안정화 장치로 기여한다. 특히 교육과 직업 교육 및 역량 개발은 열악한 출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제공해주는 기반을 형성한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 즉 사회적 국가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강화된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균형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와 노동자는 거의 모든 제도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등한 지위와 권리는 자율 단체협약, 사회적 동반관계, 기업경영법,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부담하는 사회복지보험 체계와 같은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주축이다.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시장의 실패가 공동의 안녕과 사회정치적 문제와 충돌할 때 수정을 위해 개입한다. 사회 안전망과 다른 사회정치적 수단을 통해 정부는 핵심적 생활 위험에 보호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개선하며 사회적 균형을 성취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정, 안전, 자유 그리고 복지에 대한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면서 진화한다. 이런 사회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적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경영법과 공동결정 제도이다.

8)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 *Gruenbuch Arbeit 4.0*, (<http://issuu.com/support.bmaspublicispixelpark.de/docs/gruenbuch-arbeiten-vier-null?e=26749784/43070407>, 2018.10.14.).

요약에서 보듯이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은 ‘공동결정(Mitbestimmung)’ 제도가 독일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평화의 초석이라고 선언하고 있다.⁹⁾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기업 내 노동자 대변조직인 ‘종업원 평의회(Betriebsrat)’를 통해 이루어진다. 종업원 평의회가 있는 기업의 생산성이 대체적으로 높고 혁신적이며, 성별 임금격차도 비교적 적고 산재도 낮은 편이다. 종업원 참여를 통해 공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두 가지 면에서 건강하다. 기업은 투자자와 자본 시장의 단기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종업원 평의회는 장기적 전망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투자를 기업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기업은 이러한 장점을 인식하여 공동결정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특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종업원들도 이 공동결정 제도를 환영한다. 이것은 80퍼센트를 상회하는 종업원 평의원 선출 투표율에서도 나타난다. 이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정치적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현저히 능가한다.

다른 한편 많은 기업은 법제화된 공동결정 이상의 수준으로 참여의 문화를 진작시키려 하는데, 그것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제화된 수준 이상으로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사례는 「노동의 새로운 질을 향한 제언(Initiative Neue Qualität der Arbeit, INQA)에 수록되어 있다. 종업원이 민주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이해의 균형을 탄력적으로 중재하는 기제가 된다.

또한 「녹색책자」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그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미래와 관련하여 강조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Mitbestimmung— Eine Gute Sache, Alles über die Mitbestimmung und ihre rechtlichen Grundlagen*, hrsg. vo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Referat Information, Monitoring, Bürgerservice, Bibliothek), 2015 참조.

독일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강점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들과 사회적 국가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이 특별한 관계는 사회적 동반자들 간의 긴밀한 협연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많은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들이 사회적 국가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Arbeitsrecht)

종업원과 계약 상대자 간의 권리 관계를 미래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노동권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때 핵심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력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종업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종업원의 권리 보호는 디지털화된 노동세계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

인간 삶의 상당 부분은 노동의 과정이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노동 조건을 함께 만들기를 원한다. 경영 공동결정은 종업원들이 자신의 일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이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업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참여 권리를 갖고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본질적 기둥이다. 민주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이 법에 따라 해당자들은 참여 권리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개인화된 계약자로서는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국가로서의 독일은 이 법을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과업을 갖고 있다. 해당자의 책무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맹점을 제거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단체협상 자율권

다원적 사회인 독일은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노동과 경영조건을 사회적 동반자들 간의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체계(Tarif system)는 집단적 자율결정 권리를 완성한다. 이는 개인화된 중

업원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집단적 방식으로 — 기업 이상의 차원에서 —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이때 정부는 시민사회의 협상능력을 존중하여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동반자 관계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요청된다.

노동보호, 노동시간법, 기업 건강보호

가치의 창조는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생산 방식에서 발생한다. 자동화, 연결, 기계와의 협업은 증가일로에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경향을 노동자와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육체적 과부하와 단조로움이 감소하여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를 향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업과 제한 없는 근무시간이라는 문제점도 생겨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치 창조의 변화는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다. 사물인터넷은 사람의 인터넷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 장려

실업 보증을 포함하는 노동 장려는 독일 사회보장의 핵심이다. 이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위한 기본보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 시에 재정적 보호 장치와 함께 노동 장려는 실업의 위험을 줄이고 특히 개인들의 구직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고용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고용 안내 및 알선 센터 같은 공공기관은 이미 광범위하게 노동 장려의 과업을 떠맡고 있으며 실업자 중 4분의 3이 기본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 보장 체계와 지원 체계를 잘 조정하여 노동의 장려가 미래의 도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방적 대응

예방적 사고는 이미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치 창조를 향한 변화로 이미 직업과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 예방적 지원은 실업의 위험뿐 아니라 직업 유연성과 직업을 위한 역량개발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은 노동 장려 제도와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험은 물론 독일의 직업교육과 지속적 심화 및 전업교육 구조에도 해당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금과 사고보험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은 대다수 국민을 삶의 전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 변화로 인해 보장의 사각 지대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 중점적인 검토가 절실한 문제는 새로운 직업활동이 고용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보장 시스템은 고용을 기본 개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가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래의 경제는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사회를 요구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의 상황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실리콘밸리는 이 점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식이어야 한다. 창의성과 리스크에 도전하는 것은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안전망도 필요로 한다. 실패했을 경우 사회로부터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창의력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또 안정성은 창의성에 기반한다.

앞의 「녹색책자」에서 강조한 종업원 참여 공동결정에 대해 독일에서는 1년간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독일 정부는 그 결과를 2016년 11월 29일 「백색책자(Weißbuch)」로 발간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1) 노동자의 포용과 참여의 중요성

「녹색책자」에 대해 의견을 밝힌 다수의 대화 참여자들은 미래의 직업 세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을 포용하고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 성공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협상을 위한 구조적 전제와 공간, 다른 한편으로는 절충능력과 과거의 협상과정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민주적 참여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화된 공동결정(verfaßt Mitbestimmung)을 함께 생각할 때 상호 생

10)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 *Weissbuch Arbeit 4.0*, (http://issuu.com/support.bmaspublicispixelpark.de/docs/161121_wei_buch_final?e=26749784/43070404, 2018.10.14.).

산적 작용을 일으키며 종업원의 참여 가능성을 증진할 것이다.

경영의 측면에서도 참여 요소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시장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민한 결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기업 내부의 모든 재능과 관점 그리고 역량을 최적으로 참여시킴으로서만 지속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이 공동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경영자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주장과 필요도 고려되어야 한다.

「녹색책자」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독일 노동사회부는 앞으로 사회적 동반자 의식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유연한 타협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4가지 핵심요소를 확인하였다. (1) 노동협약 구조의 안정화와 강화, (2) 종업원 참여 기반의 확대, (3) 디지털 노동현장의 공동결정을 위한 충분한 권리와 자원의 확보, (4) 기업 공동결정의 표준 마련이 그것이다.

노동현장을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사용자 연합 사이에 체결되는 독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업종과 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계약의 타당성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협약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사용자 연합 혹은 노동조합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 종업원 평의회는 성공적인 노동조건 형성 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디지털화를 통해 야기되는 노동현장의 격변에 대해 기업경영진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체될 수 없는 상대방이다. 따라서 노동사회부는 종업원평의회(Betriebsräte) 설립을 장려한다.

2) 종업원평의회 of 지속적 역량 개발 및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디지털 노동현장은 급속한 변화와 고도화되는 복잡성으로 노동자 대변 단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업원평의회는 기술 발전이 수반하는 조직관련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초를 찾아야 하고, 경영진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종업원 대표 단체는 한편으로 급격한 발전 상황에 대한 파악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조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사안에 식견을 갖고 있는 종업원을 종업원평의회에 자문역으로 제공해야 하며, 협약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존 공동결정 제도의 계승

기존의 공동결정 기제들을 계승해야 한다는 데 노동자는 물론 사업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4) 사회국가적 성과의 미래지향적 계승

지속적인 재정 확보 :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민을 보다 광범위하게 안전망에 포용함으로써 연대의 원칙을 강화하고 소득에 따른 과세를 강화한다.

기본소득 문제 : 독일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노동사회와의 결별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직업이 있고 기본소득보다 몇 배 높은 소득을 갖는 집단과, 자의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집단 간의 분열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상, 즉 노동을 소득을 위한 노동(Erwerbsarbeit)에만 국한시키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노동사회를 창조하려는 이상은 정반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노력을 포기한 채 대다수 사람들을 일없는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 국민 중 일부만 일을 하면서 고소득을 누리는 배타적 노동사회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노동이 효율화되고 또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면, 해결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을 덜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유연하지만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회정책의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직업활동의 지원 : 사회적 동반자 관점에서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은 개인 직업활동계좌(persönlichen Erwerbstätigenkontos)이다. 이 계좌는 직업세계에 진입한 모든 시민들이 개설하여 직업활동 전 기간

동안 유지한다. 이 계좌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우선 정부의 관리 아래 노동자의 권리가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쉽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계좌(Langzeitkonto)이다.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이 계좌는 자동으로 개설되는데 소규모 사업장과 하위소득자에게까지도 이 계좌 개설을 확대할 수 있다. 장기계좌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종업원 근무시간의 일부에 대한 지불, 혹은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보너스 수당을 유보하여 장기계좌에 기장한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안식년, 장기휴직 등의 경우 재정적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가령 55세부터 급여의 1/10을 적립하여 노동 연한을 저축하면, 65세에 이르러 1년의 노동 연한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이 계좌는 노동자들에게 개인적인 자기결정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을 증진한다. 예를 들면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직업활동 기간 동안 명확히 결정된 다양한 목적에, 즉 직업관련 전문교육, 자영업으로의 전환, 교육을 위한 안식년, 가족 간병, 조기퇴직의 상황에서 ‘출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이 계좌는 사회적 정의에 기여한다. 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대물림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유산(Sozialerbe)으로 도입된다. ‘사회적 유산’은 뚜렷한 목적을 갖는 출발자금으로서,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한다. 이는 분배와 세대간 정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때 차등화가 도입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 세금의 지원 없이 교육을 받은 청년에게는 더 많은 출발자본이 지급된다. 직업 새내기들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이 인구 구조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맺음말: 인도적 경제를 향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역할

이제 결론을 맺어보자. 우리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독일의 4차산업혁명의 심층적 동기는 민주적 협력에 기반한 그들

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계승발전 시키려는 목적으로 일과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관계를 더욱 바람직한 관계로 만들면서 사회와 일터의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독일이 현재 4차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이유는 바로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유, 창의성, 삶의 질이 사회 구성원들의 동반적 관계에 기반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호증진적으로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4차산업혁명의 설비 제작 기술 보다는 이러한 기술이 창안되는 인본적 토양이다. 이 인본적 토양이 척박한 한, 4차산업혁명의 외피는 카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카피된 외피는 4차산업혁명의 심층적 동력과 지속력을 생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바른 경제를 향한 4차산업혁명은 수행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가야할 바른 경제를 향한 4차산업혁명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겉에서만 보면 기술의 가속적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이지만, 그 혁명의 실질적 주체인 인간을 기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 4차산업혁명 자체가 인간이 사라지는 반인간적 혁명이 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은 인간을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인도주의적-문화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문화적, 인도적 관점에 다시 기획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주체가 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다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동반자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제 비로소 각성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 구성구석이 갑을 관계로 짜여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4차산업혁명의 실질적 동력인 동반자적 협력을 통한 창의성 발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을 관계의 시급한 청산이 절실하며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그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향한 문화적 혁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직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하

는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런 문화를 활성화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영자와 노동자는 주요한 갈등의 축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업의 장기적 이익은 갈등보다는 상호협력과 상호이해에서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식 공동결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4차산업혁명의 실질적 주역인 기업이 인도적 경제를 향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논해보자. 우선 기업은 4차산업혁명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위한 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사회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이 비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시 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회사는 진정으로 인간을 사용자로, 소비자로 하고 있는가. 경제 경영의 영역에서 소비자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때 소비자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망각되는 경우가 흔하다. 때문에 기업이 진정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경제와 그 토양위에서 전개되는 4차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스스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정말 문화 활동을 본질로 하는 인간을 소비자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과연 인간으로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갖는 문화재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호모이코노미쿠스를 위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호모콜투랄리스, 즉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문화적 존재로서 상품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존재이지 상품을 그저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만이 그러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복종의식보다는 ‘숙성의 미학을 체현하고 있는 장인으로서 궁지에 찬 노동의식을 고양시켜야 된다.’ 동시에 조직 발전의 실질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또 고취시켜야 된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도입도 비용절감이나 생산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직원 간의 협력적 창의성의 활성화와’ 또 ‘일을 노역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활동으로 승화시킬 목적’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봇의 개념을 코봇(Cobot)으로 혁신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코봇은 완전자동화를 통해 공장설비의 무인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일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의 일이 노역이 아니라 성취행위가 되도록 인간과 일의 관계를 행복하게 조율하는 조력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인간들의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여유시간 확보, 또 노동환경 유연화에 따른 직무 선택의 탄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반의 변화와 직업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의 다양한 능력 개발 지원하고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하며 소모 고갈 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다양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발 숙성되고 또 성취되는 현장 학습 공간으로서 혁신되어야 한다.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 경제를 향하는 4차산업혁명에서는 기업, 즉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이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 학습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와 협력아래 이러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노동자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진 발전되어 사회 전체의 발전 역량이 확보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이 인간을 배려하는 인간을 위한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의 기업들이 선구적으로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기업은 근대 세계 경제사 전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확신하며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자료>

홍승봉, “한국 12년간 OECD 자살률 1위 자살의 원인과 대책”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2ahUKEwjS2O-smZTfAhWGzLwKHUP8A_oQFjAAegQIBxAC&url=http%3A%2F%2Fendotoday.com%2Fendotoday%2Fsuicide_04.pdf&usg=AOvVaw3h6WdNXG6SFGELxvmLvmT, 2018.10.14).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 *Gruenbuch Arbeit 4.0*, 2016.
(<http://issuu.com/support.bmaspublicispixelpark.de/docs/gruenbuch-arbeiten-vier-null?e=26749784/43070407>, 2018.10.14).

_____, *Eine Gute Sache, Alles über die Mitbestimmung und ihre rechtlichen Grundlagen*,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Referat Information, Monitoring, Bürgerservice, Bibliothek), 53107 Bonn, September 2015.

_____, *Weissbuch Arbeit 4.0*,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 2015. (http://issuu.com/support.bmaspublicispixelpark.de/docs/161121_wei_buch_final?e=26749784/43070404, 2018.10.14.).

Landeskirchenamt der Evangelischen Kirche von Westfalen, “Die Soziale Marktwirtschaft ethisch weiterdenken”, 2009. (http://www.evangelisch-in-westfalen.de/fileadmin/user_upload/Angebote/Beratung/gesellschaftliche_Frage/soziale_marktwirtschaft_ethisch_weiter_denken.pdf, 2018.10.14.).

<연구논저>

Röpke, Wilhelm, *Die Gesellschaftskrisis der Gegenwart*, Eugen Rentsch, 1942.
_____, *The Social Crisis of Our Time*, Univ. of Chicago Press,

1950.

_____, *Civitas Humana*, Erlenbach, Eugen Rentsch, 1949(1944).

AWS(Arbeitsgemeinschaft Wirtschaft und Schule), “Die österreichische Sozialpartnerschaft,” *Aktuelle Unterlage*, No. 82, 2015.

Eucken, Walter, “Das ordnungspolitische Problem”, *ORDO*, Bd. 1, 1948, pp. 56~90.

Fichter, Michael & Ian Greer, “Sozialpartnerschaft als Gewerkschaftsstrategie -Beispiele aus 5 Laendern”, *WSI Mitteilungen*, (9), 2003, pp. 541~548.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Workplace

Lee, Jong Kwan*

Since 2016, South Korea has taken par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as endeavored to stand at the forefront of the global movement. However, the nation's vis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ill relies heavily on the 4th Industrial Report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which is led by Davos Forum, and has been biased toward the market-oriented technology. The government has declared a human-center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 discussions over and the studies about humans are not easily found. At the present time—be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the number of antisoci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speculation on real estate and virtual currency is rising. In this contex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our current economic and cultural situation and reveals human existence as *Homo Culturalis* in order to ma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truly human-centered revolution. By re-illumin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Germany which has enjoyed a socio-economic prosperity based on the human understanding of *Homo Culturalis* from the perspective of its social market economy, the paper identifies the locomotive p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democratization in the workplace, rather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conclusion, the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the enterprises—which are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actual driving for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outh Korea—after draw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rmany.

Key wor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tcoin Speculation, Real Estate Speculation, Homo Culturalis, Germany, Social Market Economy, Democratization in the Workplace

필자 E-Mail: sjklee@skku.edu

투고일: 2018년 10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0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05일